



전기요금 할인 복지 강화 에너지 위기 함께 넘는다

한국전력공사

국제적인 연료 값 상승이 국내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과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그야말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민들이 삶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연료가격을 반영한 가스요금 인상과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증가가 겹쳐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운영=한전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0개 지원대상, 총 370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액할인 가구는 매달 최대 2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세자녀 이상 등에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한전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는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돼 지난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대상과 할인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할인금액만 하더라도 2018년 5540억원→2019년 5712억원→2020년 5854억원→2021년 5835억원→2022년 6800억원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와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유예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는 월 사용량 313kWh를 넘어설 경우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해 시기별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혹여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문자나 우편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와 사이버지점(kepco.co.kr), 한전 지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를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혜율 높인다=한전은 보건복지부와 보훈처 등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정보를 취득해 수혜대상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10개 대상 370만호 전기요금 감면

세 자녀 이상 가구 30% 할인 지원

할인금액 매년 증가 2022년 6800억

정부부처와 협의 수혜대상 발굴 총력

복지시설 등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요금 분할 납부 소상공인 확대 시행

거를 마련했는데, 정부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즉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검침회사와 공동으로 누락고객에 대해 전화, 방문 등 현장 발굴활동을 통한 혜택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의 부단한 노력으로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며 최근 5개년(2016-2021)간 연평균 4.23% 증가하며 지난 2022년 말 기준 370만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한전은 잦은 이사와 실거주지 상이, 연락처 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 정부 행정망 연계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지원=한전은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직접지원 외에도 취약계층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고비용 시기가 지속되는 만큼,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선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고효율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고효율가전을 구매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의 냉난방설비 구매비용 또한 최대 1600만원 지원한다.

한전은 또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연계 효율화 사업을 확대한다.

뿌리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와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4개 품목을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경우 일반고객 대비 지원금을 많게는 2배 상향해 지원한다. 한전은 지

난해 고효율기기 보급에 55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 평균 연간 5700만원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증액한 220억원 투입, 지원기기 품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인 KEPCO-ES와 합동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진단·컨설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 없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12억원을 투입해 참여기업 평균 5900만원의 연간 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무상 에너지 진단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이 에너지진단 이후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효율개선이 시급한 전력 다소비 양식장, 시설원에 농가 등을 대상으로 양어장 펌프, 인버터, LED 등 6개 품목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한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버텼지만, 연이은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취약계층에만 국한된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과 납기연장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최대 50%의 전기요금 지원,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했다.

한전은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승일 한전 사장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뿌리기업(금속 열처리)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은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AI 안부 든든 서비스'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